

동서발전, 1.2조 투자 청정 프로젝트 지역균형·신산업 육성 두 마리 토끼

정부 탄소중립 연계한 대형 사업
영주 무탄소 개발, 북부내륙 새 동력
174억 지원·1008억 세수 효과 기대
산단·AI센터 있는 융합산업 클러스터
생산유발 2조3460억, 지역성장 견인

한국동서발전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대규모 청정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동서발전은 지난 8일 영주시청 강당에서 경상북도, 영주시와 총 1조 2000억 원 규모의 무탄소 전원 개발사업 공동협력 및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정에너지 산업 확산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견인하는 대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영남권 내 발전사업 입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에너지 공급의 지역적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산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북부 내륙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5년까지 총 1.5기가와트(GW) 규모의 무탄소 전원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경쟁입찰 공모가 곧 시행될 예정이다. 동서발전은 경북도 및 영주시와 협력해 해당 입찰에 적극 참여하고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영주를 대한민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8일 영주시청 강당에서 경상북도, 영주시와 총 1조 2000억 원 규모의 무탄소 전원개발사업 공동협력 및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임종득 의원, 경북도청 양금희 경제부지사, 한국동서발전 권명호 사장, 영주시장 유정근 권한대행, 영주시의회 김병기 의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동서발전

국대표 무탄소 에너지 거점 도시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사업의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통해 약 174억 원 규모의 지역 지원금이 지급되고, 지방세수는 1008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유발효과 역시 약 2조 34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단순한 전력 공급 차원을 넘어 향후 10년간 영주 지역 경제와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무탄소 전원개발사업은 단순한 발전소 건설에 그치지 않고, 영주시가 추진 중인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및 기존 도시공업 지역과 연계되어 에너지와 제조업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토대가 된다. 청정에너지 기반

의 안정적 전력 공급은 제조업 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력 다소비 신산업의 입지를 확보하는 데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용 창출과 세수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 인프라 개선, 문화·복지 서비스 확충 등 지역 주민 생활 여건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이번 투자는 한국동서발전의 미래 전략이자 국가 수소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대규모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기술개발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청정에너지 산업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속도

산업부, 제6차 신재생 기본계획 마련
에너지 전환·경제 성장전략 동시 반영
보급혁신·참여모델 확산 등 구체 과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들어갔다.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산업·투자 전략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9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신기본)’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기본은 신재생에너지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10년 이상의 계획기간을 설정해 5년마다 수립된다. 이번 제6차 신기본은 ▲재생에너지 보급 상황 로드맵 ▲재생에너지



공공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모습. /뉴시스

산업경쟁력 강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확산 등 핵심 과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산·학·연 전문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통해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올해 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며, 같은 달 22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을 주요 정책축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신기본은 에너지 전환을 넘어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와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가 주력전원이자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을 제공하는 혁신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기본 수립과정에서도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 협단체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발표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aT, K-푸드 지재권 대응 본격화

농식품부와 세미나 공동 주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및 침해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aT는 지난 주말 현지 진출한 국기기업이 밀집한 칭다오에서 주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총영사 류창수)과 합

계 이 행사를 진행했다. 중국시장에 진출한 식품기업 30개사가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최근 변화된 중국의 지적재산권 규정을 소개했다. 또 상표출원·등록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이 안내됐다.

aT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동북아IP센터와 협력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대응 방안을 설

명했다. 또 수출 준비부터 현지 상표권 등록까지 일괄 지원하는 현지화 지원사업을 비롯해, aT의 주요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한 K-푸드 수출 확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기업 J사 관계자는 “상표권 침해 사례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신고, 행정보호, 사법보호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알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봄감자 생산량 2년 만에 다시 ‘감소’

통계청,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봄감자 생산량이 2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상여건 악화에 더해 파종기 가격 하락 여파로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모두 줄어든 영향이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5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봄감자 생산량은 35만6000톤(t)으로 1년 전에 비해 10.5%(4만2000t) 감소했다.

봄감자 생산량은 지난 2019년 46만 5948t까지 늘었다가 2022년에 30만 3000t까지 줄어든 바 있다. 이후 2023년에 반등했지만 2년 만에 다시 감소로 전환했다.

봄감자 파종기인 3월 가격 하락으로 재배면적이 줄었다. 또 생육기 저온 및 일조량 부족으로 10a(아르)당 생산량이 줄어 전체 생산량이 감소한 영향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감자(수미·상품·1kg) 3월 평균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2023년 2396원에서 작년 2281원을 기록한 뒤 올해 1889원으로 내렸다.

이에 따라 재배면적은 2023년 1만



서울의 한 대형마트. /뉴시스

4699헥타르(ha)에서 작년 1만5521ha, 올해 1만4927ha를 보였다. 신장기(4월) 저온 피해 및 비대기(5월) 일조량 부족 등으로 10a당 생산량도 2383kg으로 전년의 2562kg보다 179kg(-7.0%) 감소했다.

시도별 생산량을 보면 경북이 6만 5000t으로 전체 생산량의 18.3%를 차지했다. 이어 충남 5만8000t(16.4%), 강원 4만8000t(13.6%) 순으로 집계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국립환경과학원, 아시아 실내환경 해결 모색

서울서 3개국 첫 국제포럼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2025 아시아 실내환경 국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10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실내 공기질 문제 해결을 위해 처음으로 아시아 각국의 정부와 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회의에는 우리나라, 싱가포르, 일본의 3개국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해, 실내 공기질 정책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 첫째 날에는 이들 3개국 전문가들이 서울 시청역 지하역사와 소공동 지하도상가를 방문해 국내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시설과 관리 시스템을 둘러본

다. 이후에는 인천 서구 소재 국립환경과학원 부지 내에 최근 개소한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의 실험용 주택 등 첨단 연구시설을 견학하게 된다.

둘째 날에는 각국의 실내 공기질 분야의 정책 현황과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한다. 또 각국 전문가들이 토의를 통해 국가 간 실내 공기질 분야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수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이번 국제 행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실내 환경 관리에 관심이 높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도 함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협, 매년 1조7000억 절감 해법 찾는다

연간 900만t 부산물 처리 대책 논의

농협이 농산 부산물 처리비용 절감에 나섰다. 매년 약 900만 톤(t)의 농산 부산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9일 농협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 식품R&D(연구·개발)연구소는 지난 4~5일 이틀간 대전에서 ‘2025년 농산 부산물 활용 부가가치 창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농촌진흥청의 국책과제인 ‘과실 부산물 제로웨이스트 기반 다용도 소재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농협은 국내에서 매년 약 900만t의 농산 부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참석자들은 연간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산물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지역농협별 부산물 발생 현황 공유 ▲부산물 제품화 기술 소개 ▲업사이클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업사이클링이란 기존 재활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버려진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예술적·환경적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행사에는 국립식량과학원, 농협사료, 13개 지역농협, 광동제약, 케이바이오스 등 산학연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했다.

강대의 농협식품R&D연구소장은 “농산 부산물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은 환경과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